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사회계(오후)>

1.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가]

교육, 의료, 퇴직 연금, 불평등의 축소, 고용, 지속 가능한 발전 등과 같은 공동의 목표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고 사용할 것인지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결정할 것인가? 정확히 어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을 택하느냐가 모든 사회에서 정치적 갈등의 핵심이다. 따라서 과세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이다. 세금이 없다면 운명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집단행동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언제나 사실이였다. 때문에 모든 주요 정치적 격변의 핵심에는 국가 재정의 혁명이 자리 잡고 있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 현대적 재분배는 부자에게서 빈자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대적 재분배는 그보다는 의료, 교육, 연금을 비롯해 대체로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 서비스와 대체 소득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 및 의료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실제로 동등한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적 재분배는 기본권의 논리 그리고 기초적인 상품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국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출을 늘렸다.

[나]

정부는 사회 복지 차원에서 어떤 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가격을 규제할 때도 있다. 이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임금이 최소한 어떤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미숙련 노동의 공급량은 늘어나는 반면, 수요량은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미숙련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미숙련 노동자들 사이에 그만큼의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한다.

최저임금제의 대안으로 효율임금제가 실시되고 있다. 효율임금제는 기업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 높은 실질임금을 지불한다면 이들은 본인이 일하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만족감에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제로 A마트는 2015년 최고경영자가 직원 1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 연설에서 급여 인상과 미숙련 노동자들의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2016년 초까지 고객 서비스 목표를 달성한 매장의 비율은 지난해 16%에서 75%로 높아졌고 매출은 전년도의 부진을 만회하고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다]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이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 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내일 바다에 나와 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허생이 삼십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대경해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너희들,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백 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백 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인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백 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필을 거느리고 오너라.”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생은 몸소 이천 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어느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쫓아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라]

소득 분배란 생산에서 발생한 가치를 생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여 정도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의 몫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의 양과 질을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의 분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의 공평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 상대적 박탈감, 계층 간 갈등과 사회 불안을 불러와 건전한 경제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을 통해 분배되는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가령 정부는 보건 의료 및 기초 생활비 지원, 공공 근로 사업, 사회 보험 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해 완전 고용, 최저임금 보장 등의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는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방 도시에는 각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전략 산업 육성, 지역 인재 양성에 투자하며, 농촌·산촌·어촌 생활 기반의 확충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마]

신돈은 왕에게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할 것을 청원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각처에 포고문을 붙였다. “근래에 기강이 크게 무너지자 탐오함이 풍습이 되어 …… 토지와 백성을 권세 있는 집들이 강탈하여 차지하였다. 그들은 주인에게 반환하도록 한 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양민을 노예로 삼았다. 그리고 각 주·현의 역리, 관노, 백성들로서 자기 역을 도피한 자를 모조리 은닉하여 크게 농장을 차렸다. 이로 인해 백성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궁핍하게 만들고 있는바 이것이 하늘에 감응하여 부단히 수재, 한재, 역질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도감을 설치하고 그 시정 사업을 담당케 하였으니 서울에서는 15일 이내로, 지방에서는 40일 이내로 자기 잘못을 알고 스스로 시정하는 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일이 발각된 자는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무고한 자는 그 벌을 도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명령이 반포되니 세도 있는 많은 집이 차지했던 전민(田民)을 그 주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모두 기뻐하였다.

[바]

국가의 정책이나 다양한 사회 집단의 실천 못지않게 개인적 차원의 실천도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 차원의 도움은 큰 힘이 된다.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표적인 실천 중 하나가 기부다. 세계 최대 기부자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A씨는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부유세 과세보다 기부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08년 일선에서 은퇴한 후 A씨에 대한 수식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인물’로 바뀌었고 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범이 되었다.

한편, B국에서는 최근 기부의 확산을 막는 세법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¹⁾가 세액 공제²⁾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소득액의 10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졌던 이전과 비교하면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C국의 경우 소득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시행하고 있고, D국도 기부금의 20~40%를 소득 공제로 해 준다. 하지만 최근 B국이 개정한 세법은 개인의 세금 부담을 높여 기부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소득 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 2) 세액 공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

[사]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단인 임금과 복지는 서로 보완적이다. 경쟁으로 작동하는 시장 경제에서 불평등한 분배가 불가피한 결과이기 때문에 임금 분배만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그러기에 복지 지출을 통한 재분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의 최우선은 실업자, 노약자, 빈곤층과 같은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임금 없는 복지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가 임금을 대체할 수 없다. 복지를 통한 재분배는 기업 자체의 임금 분배가 해결하지 못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조적 수단이다. 시장에서의 임금 분배 구조, 고용 구조, 그리고 기업 구조를 개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복지 예산을 늘리는 재분배의 확대만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경제 성장의 성과 중에서 국민에게 분배되는 몫이 줄어들고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해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분배 정책 및 기업의 임금 분배 방식을 모두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I]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30점]

[문제 II]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 [나]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문제 III]

개인 A와 B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여 만족감을 최대한 얻고자 한다. 기부는 만 원 단위로 하고, 기부를 통한 사회 전체의 기부 금액과 만족감은 개인 A와 B의 합이라고 가정하자. 만족감은 기부 금액에 대한 이차 함수로 나타나며, 개인 A와 B 모두 기부 금액이 낮은 수준에서 기부금을 더 낼 때는 본인의 만족감이 증가하나, 기부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생활 수준에 지장이 생겨 기부금을 더 낼 때의 만족감이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개인 A는 3만 원을 낼 때 16의 최대 만족감을, 개인 B는 5만 원을 낼 때 98의 최대 만족감을 얻는다. 개인 A와 B가 기부를 전혀 하지 않을 때의 만족감은 각각 7, 48이고, 기부를 통해 얻는 만족감이 이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 더 이상 기부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기부에 동참하는 개인에 한하여 특정 금액 이상으로 최소한의 기부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자. 정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기부 요구 금액을 3~10만 원 사이에서 만 원 단위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

사회 전체의 만족감이 최대가 되게 하는 정부의 최소 기부 요구 금액을 구하고, 이때의 전체 만족감과 전체 기부 금액을 계산하시오. 전체 기부 금액이 최대가 되게 하는 최소 기부 요구 금액을 구하고, 이때의 전체 만족감과 전체 기부 금액을 계산하시오. 개인 A와 B 모두 기부를 포기하게 하는 최소 기부 요구 금액을 구하고, 이때의 전체 만족감과 전체 기부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상의 계산 결과들을 근거로 제시문 [바]를 평가하시오. [수식 및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